

“통합 광주·전남 단체장 권한 견제, 부시장 인사청문회로”

통합 광주·전남 단체장의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역민의 우려에 대해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인사권을 통한 견제 방안이 제기됐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4년간 총 20조원 지원 이후에도 항구적으로 매년 3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특별시 명칭 논란으로 희석될 수 있는 ‘광주정신’의 존속을 위해 ‘헌장’을 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기초의원들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통합 이후 단체장 권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과 함께 중앙정부의 4년간 20조원 지원 종료 이후 대책, 광주정신 소멸 우려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선화 광주 동구의장은 “통합특별시 단체장에게 부여되는 권한의 규모에 비해 이를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권한 견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임 구청장은 “통합시장에 대한 권한 분산과 견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통합시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이후 특별시장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각 2명씩 총 4명을 두게 되는 만큼, 의회에 부시장 인사청문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시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를 위한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 산하 감찰위원장을 두는 방안과 함께 최소한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김영록(왼쪽 두번째) 전남도지사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광주서 지역민 대상 2차 광주·전남 통합 타운홀미팅 ‘4년 20조’ 중앙 지원 이후에도 “항구적 3조원 지원”

를 거쳐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통합특별시 4년간 20조원 지원 이후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재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년간 20조원은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자원으로 쓰여

선 안된다. 반도체 산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 육성에도 집중돼야 한다”며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이후 재정분권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소 매년 3조원 정도의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잠정 합의되면서 광주의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장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 구청장은 “명칭이 합의됐다고 해서 광주의 정체성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남광주특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27개 시·군·구의 특성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브랜드 안에는 광주와 5·18, 민주주의의 역사도 모두 포함돼 있다”며 “국가에 헌법이 있듯 통합특별시에도 이에 준하는 헌장을 제정해 광주의 정신과 전남의 역사, 지역의 이념과 철학을 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운영일 광산구의원, 재활용품 용역 입찰 문제 “바로잡아야”

‘先 계약 後 허가’ 뒤바뀐 절차 재차 지적

운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장동)이 4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7월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8월 21일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관련 허가 취득 시점은 계약 체결 이후인 8월 29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정부 관계 부처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닌 자와 계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현재 공고문대로라면 허가 업체들이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입찰 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5일 행정안전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리 구에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한 사항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구정 질문과 제안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주민의 목소리”라며, “집행부의 피드백이 부족하면 의정활동의 본질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계획 중인 범제처 질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그 과정을 의회와 긴밀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운영일 의원은 끝으로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책임 행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광산구 행정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준행 기자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 주철현 “원조친명, 내가 책임자”

“전남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와 전남 동부권의 대도약 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전남광주특별시사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며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해 동부 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천의 동부 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제167~178조)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 지원 특례(제322조)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 통합 후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과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통합 특별시의 연간 운용 예산 약 25조원 중 20% 내외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동부권 지원 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산업 전환과 기반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7대 핵심 공약은 ▲전남동부청사를 기획·인사·미래 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청사로 격상 ▲여수·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K-화학, 수소환원제철) ▲농어가 기본 수당 연 120만 원 지급 및 햇빛 연금 확대 시행 ▲고흥의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항공·차세대 방위산업 요충지로 육성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 용지, 물류 인프라 결합된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선도적 구축 ▲광양항·여수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 및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구축이다. 전체 농어가에 연 120만원 ‘농어가기본수당 지급 및 햇빛연금 확대 시행’도 담았다.

주 의원은 “여수시를 1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낸 경험과 역량을 전남·광주와 전남 동부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을 각오”라며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남의 몫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책임자”라며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단단히 결합해 전남과 광주를 균형발전시키고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뉴스1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섭(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